

전국 시도지사 “자치권 확대·재정권 강화” 한목소리

시도지사 정책 콘퍼런스 공동선언문 발표...지방위기 극복 해법 제시
강기정 광주시장 “AI와 미래모빌리티로 사람과 기업 모이게 하겠다”
김영록 전남지사 “실질적인 지방분권 실현 위해 헌법 개정 시급하다”

전국 시도지사들이 저출생·고령화와 지방대학 소멸 등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권의 확대와 재정권의 강화가 필요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관련기사 3면〉
또 자신들이 구상하고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뒷받침을 요청했다.

10일 ‘대한민국의 미래, 지역에서 답을 찾다’ 주제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등 전국 시도지사가 각각의 정책을 발표하는 ‘시도지사협의회 정책 콘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렸다. 시도지사들이 한국이 직면한 주요 위기를 진단하고 지방정부의 입장에서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협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려 주목을 받았다.

본격적인 정책 발표 전 17개 시도지사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내년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이 되는 해”라며 “그동안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 왔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최근 ▲청년 인구의 유출로 인한 지역경제 위

축 ▲지방 소멸 심화 ▲저출생 및 인구 감소 ▲고령사회 등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우려했다.

협의회는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으로 혁신역량을 분산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결의한다”며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교육특구 사업을 통해 지역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창업과 혁신을 촉진하는 환경을 조성해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저출생·고령화와 지방대학 소멸 등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권의 확대와 재정권의 강화가 필요하다”며 “동시에 중앙과 지방 간에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방이 스스로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인구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청년층이 결혼하고 육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며, 주거와 일자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외국인 정책을 조정하고, 이주인에 대한 포용 정책을 강화해 인구 감소와 특정 산업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미국 주지사 협의회장인 제러드 폴리스 콜로라도 주지사, 일본 전국지사 회장인 무라이 요시히로 미야기현 지사가 각각 영상을 통해 축사를 전했다.

정책 발표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를 비롯해 4명의 시도지사가 지방분권 강화, 중앙-지방패러다임 변화, 균형발전과 지속가능 등을 주제로 해 여전히 강력한 우리나라의 중앙집권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에 공감했다.

이날 강기정 시장은 ‘AI와 미래 모빌리티로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기회 도시 광주’를 주제로 “저출생 등 인구 위기가 현실화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AI)과 미래차, 창업과 실증을 중심으로 하는 전략적인 미래산업 설계, 지역 인재양성사다리 완성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록 지사는 ‘독일연방제에서 보는 지방분권 강화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지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을 신설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명확한 사무배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보장해야 한다”며 “또한 자율성과 책임에 기반한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보장을 통해 지방이 실질적 자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9월 폭염...쿨링포그 아래로 낮 최고기온이 35도 이상 올라 광주-전남 전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10일 오후 광주시 동구 금남로에서 시민들이 쿨링포그 아래를 지나가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김영란법 식사비 인상에도 식당가 ‘시큰둥’ ▶6면
KIA 최원준, 소리 없이 강하다 ▶18면
위경혜의 호남극장 영화사 - ‘애마부인’ ▶22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햅쌀 10만 t 사료용 처분 암소 1만 마리 추가 감축



당정, 추석 쌀값·소값 안정 나서...전남도·농민단체 근본대책 요구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한 과잉 생산분 시장 격리를 포함한 쌀값 안정 대책이 마련된다. 소 사육 두수 감축을 비롯한 한우 수급 불안 해소 방안도 마련됐다. 하지만, 전남도와 농민단체 등은 쌀값-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현장에서는 쌀값-한우가격 하락을 막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관련기사 7·10면〉
정부와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우선, 당정은 올해 쌀 공급과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우선 2만ha(1ha는 1만㎡)의 재배면적을 즉시 격리, 사료용으로 처분하기로 했다. 2만 ha의 쌀 생산량은 대략 10만 t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가 공공비축미로 사들이기로 한 올해 밭쌀

36만 t이다. 이번 처분 물량까지 더하면 46만t을 시장에서 격리하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또 다듬달 통계청의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이 발표되면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에 대해 추가 격리하기로 했다.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반복되는 과잉 생산 문제 해결을 위해 벼 재배 면적 감축 목표 상향과 재배면적 신고제 및 지역별 감축면적 할당제 등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감축 면적 조정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과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생산자 단체 측과 협의를 거쳐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한우 시장 안정화 대책도 제시됐다.

당정은 또 한우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추석 이

후에도 대대적인 할인행사와 단체급식 등 원료육 납품을 지원하고, 기존 13만 9000 마리에 더해 암소 1만 마리를 추가로 감축하기로 했다.

사료 구매자금 한우농가 지원분 6387억원 상환 기한을 1년 연장하고 자금 규모도 올해처럼 1조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폐에도 자급률 40%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우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추진된다. 사육 기간 단축(30개월 → 24~26개월)과 스마트 축사 확산, 도·소매 가격 연동 강화, 숙성육 시장 활성화, 수출 대상국 확대 등 정책도 제시됐다.

전남도와 도의회, 농민단체 등은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전남도는 올해 공공비축미로 거둬들인 전남 쌀 배정 물량을 확대하고 시장 격리 물량을 추가하고 해외원조물량으로 미리 격리하는 등 보완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도의회도 오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 성명서를 낸다. 정의당 전남도당도 양곡관리법 제정 등 보다 근본적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한우 농가들도 비슷한 입장으로 경북 다음으로 한우 사육농가가 가장 많은 전남도도 미흡한 한우 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라남도

완벽한 전남 여행을 위한 전남관광플랫폼

전남관광플랫폼으로 더욱 특별한 전남여행을 경험해보세요!

번거로운 버스 예약도

취향저격 숙박 예약도

현지인 추천 맛집 예약도

투어, 티켓 예약도

교통, 체험, 맛집, 체험까지 한방에 할인

지금 QR코드를 찍고 전남관광플랫폼 JN TOUR를 다운 받아보세요!

다운로드하기
Google Play

Available on the
App Store

관광

교통

숙소

맛집